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결의안

(추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95
----------	------

발의연월일: 2024년 8월 일
발 의 자: 추선미, 안극수, 김장권, 안광림,
정용한, 구재평, 김종환, 민영미,
박주윤, 김보미, 황금석, 박명순
의원 (이상 12명)

□ 제안이유

○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성남시민 등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률은 부재하고, 정부의 대처 또한 국민의 기대에 비해 미흡함. 정부와 국회, 경기도, 성남시 등 관계 기관에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전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전기차 소유주와 일반 주민들 간의 갈등도 유발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국회,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성남시
- 붙 임: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 결의안 1부.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결의안

성남시 의원 일동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경기도 및 성남시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전기차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적인 차량 화재와 달리 폭발을 동반해 급격히 확산되고, 소화가 어렵다.

특히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전기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매우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불안감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의회는 성남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성남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정부는 전기차 및 지하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부처 회의 등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

둘째, 국회는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아직 미비한 상태로,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셋째, 성남시는 전기차와 관련된 주민 간 갈등과 안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라.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남시 내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성남시는 주민 안전 보호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하라.

2024. . .

성 남 시 의 회